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2017

KINU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2017

KINU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2017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인 쇄 처 호정씨앤피

ⓒ 통일연구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20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동북아정세 ····· 1

1. 동북아 질서 ····· 3
2. 미국 ····· 9
3. 일본 ····· 15
4. 중국 ····· 20
5. 러시아 ····· 26

Ⅱ. 북한정세 ····· 31

1. 정치동향 ····· 33
2. 경제동향 ····· 39
3. 사회동향 ····· 45
4. 북핵 문제 및 대외동향 ····· 50
5. 대남동향 ····· 56

Ⅲ. 남북한관계 ····· 61

1. 대북정책 ····· 63
2. 통일정책 ····· 68

Ⅳ.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 73

1. 북한인권문제 ····· 75
2. 대북지원 ····· 85
3. 북한이탈주민문제 ····· 91

부록 ····· 97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질서

가. 2016년 정세

2016년 동북아시아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강대국정치의 재현을 목도하였다.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남중국해에서의 힘겨루기는 미중 전략경쟁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북한 등 역내 국가들은 미중 간 지정학적 권력 게임에 패를 펼쳐 보이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형국이었다.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강력한 다자제재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가 3월 의결되었다. 비핵화 규범에 정면도전하는 북한의 무역·금융·인적교류 등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그물망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은 이차제재(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제재법(H.R. 757)을 제정하고 북한을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고강도 독자제재에 나섰다. 또한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동맹·협력국가 결속에 진력하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한 확장억제공약강화 및 중국 견제차원에서 한반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한국도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 GSOMIA) 체결이 상징해 주듯, 그간 소원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게 된다. 북한의 전략도발과 핵무기 실전배치 가시화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응집력 강화효과를 초래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에 반발하며, 동맹체제 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로 인식한 한국을 겨냥하여 사드배치 결정철회를 강압하는 등 외교압박과 한한령(限韓令), 국내법·행정규칙을 동원한 비가시적인 경제·문화 보복조치를 취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독자제재를 비판하며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논의 병행을 주장하는 한편,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의 민생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활용하여 제재수위를 조절하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는 중국의 중북접근을 불러온 셈이다.

미중 경쟁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도, 비록 일본 등 분쟁관련국이 바라는 강력한 수준의 대응은 아닐지라도, 미국은 동남아제국과의 해상훈련과 전선·항공기 파견 등을 통해 통항자유의 원칙확보를 위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패소하면서 국제법적 정당성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중국도 인공섬 축조·요새화, 항공모함건조, 전략폭격기발진,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회유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미국과 동남아제국들과의 대중연계구도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일중관계 악화와 한중관계 경색을 고리로 동중국해 및 서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일한 역내 동맹세력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 유지를 배려하려는 듯, 국제사회 대북제재국면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을 초대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고위급대화를 성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북한은 핵도발로 유발된 미중·남북 대립구도 심화와 미중갈등이 초

래한 국제제재체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의 균열을 한껏 이용하는 모양새다.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에 맞서 동방 핵강국 건설에 매진하는 단호한 통치자로서 김정은의 카리스마를 부각시키며 세습유일영도체계의 공고화에 돌입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핵·경제 병진노선 항구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북핵 피로증에 시달리는 임기 말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미북 평화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석탄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는 등 보다 강화된 유엔안보리결의안 2321호를 불러오긴 했지만,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보유 및 고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연이은 핵도발로 정권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미중 갈등의 틈새를 파고드는 지정학적 생존전략으로 제재포위망 돌파를 기도했다.

동북아 지정학게임의 체스판에서 일본과 러시아도 미중경쟁과 북핵문제를 활용하는 묘수를 찾기 위해 분주한 2016년이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선거전 연승과 경제적 안정으로 다져진 국내적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 및 동맹 강화정책이라는 대외적 호재에 적극 편승할 수 있었다. 미중갈등을 미일동맹 대 중국의 대립구도로 부각시키며 대중견제 및 적극적 평화주의노선 실현에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던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보호협정체결 등으로 안보협력을 증폭시켜 한미일 삼각공조강화에도 진력했다.

러시아도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중국과는 대북제재·사드배치문제에 공조하고 합동군사훈련의 틀을 유지하는 등 대미견제 반자유주의 유라시아 대륙동맹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판 헤징전략의

일환으로 극동개발과 경제협력을 매개로 역내 역할증대와 북방영토문제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선다.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미국과 한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2017년 전망

동북아 다극체제로의 전환과 지정학적 세력균형 게임의 룰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급격한 거대 변화가 없다면, 2017년에도 이러한 구조적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현상변경세력은 다극체제로의 전환과 세력전이가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 증가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다. 즉, 중국은 확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상굴기를 추구하며 미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동맹 균열과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다. 동중국해나 서해의 분쟁지역화전략으로 역내 긴장고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미중갈등, 한중경색, 중일대립의 간극을 파고들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북 피로감이 만연된 한미동맹을 상대로 평화협정 등을 압박하며 한반도현상 변경에 나설 것이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력과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전을 거부하며, 동맹·협력국가 체제 정비를 통해 역내영향력의 급격한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육상전력의 소모가 예상되는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 군사개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며, 자국의 국력보존·회복에 주력하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의 역할 변화라는 장기적 추세를 무리하게 거스르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도 이슈·상황별로 제한적 견제(Balancing)·편승(Bandwagoning)을 번갈아 구사하는 전략적 헤징으로 위험분산과 이익 극대화에 진력할 것이다.

각국 최고지도자와 정권적 성향의 변경은 비교적 불변인 동아시아 구조적 전략 경쟁의 틀 내에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격렬했던 미국대선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등장한 강력한 후임 대통령 트럼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가적 현실주의로 무장한 차기 대통령과 플린(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내정자 등 신보수주의 성향을 지닌 외교안보분야 참모진의 면모는 강화된 대중견제와 대북압박을 예상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제조업 부활과 공정무역 주장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최소한 임기 초반부에는 환율조작국지정, 보복관세부과 등을 무기로 강력한 대중경제압박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핵심'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주석도 대외적 약세이미지를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2017년 미중경쟁과 갈등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동북아의 또 다른 강력한 지도자(Strongmen)들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수상의 희비는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친러 성향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개선으로 시리아 교착상태해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래된 대러 국제제재이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미관계개선을 기초로 일본·한국 등의 극동투자 활성화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 견제강화를 위해 미국이 러시아와의 '역데탕트'를 시도하게 될 경우, 이러한 기대치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환태평양 자유무역확대조

치로 편승효과를 누리던 일본은 미국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차기정부의 환율·무역압박, 방위분담금 증가 요구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거세게 도전하는 중국의 존재가 1985년 플라자 환율협정의 악몽재연을 방지해주는 부적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 신정부의 대한·대북정책 기조가 굳어지기 전에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이 처한 안보적·외교적 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미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협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 신정부 초기에는 성향 파악에 주력하며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나, 협상난항이나 대북 비핵화압박지속이 예상될 경우, 또 다른 핵실험이나 전략적 도발로 핵무장 기정사실화 및 대미·대남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사전준비로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정립, 중국의 압박심화, 북한도발 재현 등 중대한 대외도전요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진하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2. 미국

가. 2016년 정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해인 2016년 올해 자신의 대외정책 업적(Legacy)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극적인 대외정책전환을 도모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사실 임기 내내 대외정책 대전략의 모호성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특정 외교이념을 대전략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이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일관적으로 받지도 않았다. 이에 몇몇의 분석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정 단면을 강조하며 진보적 실용주의(Progressive Pragmatism), 주저하는 현실주의자(Reluctant Realist), 혹은 홉스주의적 낙관주의자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외정책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방법론을 간과하지 않은 오바마 대외정책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다자적 축소(Multilateral Retrenchment)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이 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듯한 인식 가운데 미국이 반세기 넘게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질서의 유지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복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사실 일방주의로 점철되었던 지난 부시 행정부로부터의 유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대테러 전쟁 등 과도한 해외 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약

화되었고 또한 축소지향적 대외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축소의 관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미국의 재원이 집중된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따라 미국 국방력의 내적 재균형(Internal Balancing)뿐만이 아닌 지역별 재균형 전략이 이행되었고, 또한 군사적 차원의 재균형뿐만이 아닌 경제, 외교적 차원의 재균형정책이 포함된 포괄적 자원재배치 과정이 이뤄졌다. 이는 축소정책을 통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동시에 세력전이의 논란이 가중되는 서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과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러한 재균형 정책은 미중관계의 뉴노멀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최근 경쟁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에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의 사안에서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양 사안의 결과에도 알 수 있듯 미국이 축소 국면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여전히 공고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반도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도모해 보고자 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버티기(Muddling Through)가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억지, 경제제재를 통한 압박,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통한 위험회피적 대북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책임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였으며 동시에 경제·핵병진 노선의 지속과 핵능력 고도화를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북경에서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세계 비핵화 등을 요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게 2016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의 강온양면책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사라고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물론 이제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해온 것은 아니다. 세간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아래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방기해 왔다고 비난하지만, 미국은 여러 차례의 탐색적 대화를 비롯, 미국이 이란·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쏟은 노력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략적 인내'의 실패는 최근 대북제재의 출구전략으로서의 미북간 양자대화-핵동결-비핵화의 수순으로 구성된 로드맵 제시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핵동결이라는 차선은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대북제재의 최종단계(End State)라는 한미 간 공조 안에 충실할 것이다.

나. 2017년 전망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아웃사이더'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제사회는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질서(Liberal

Hegemonic Order)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아웃사이더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와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 그리고 이들의 중산층 회복으로의 희구성향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특히 소득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적한 것은 이민자 문제와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이었으며,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미국의 경제적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의 약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부상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미국 유권자들 가운데 현저해진 내향적(Introvert) 경향은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관여 거부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도 소위 신고립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신고립주의 차원의 대외정책이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며, 그러한 질서 속에서 한국 대외정책의 자율성의 외연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트럼프 대외정책 기조는 일방적 축소(Unilateral Retrenchment)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한편 이러한 현실주의적 축소정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그 내용과 명칭은 달라질지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

으로의 세력전이는 미국 행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국제사회 내부의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균형정책 내부에서도 역외균형전략의 특성과 군사적 측면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역외균형 전략은 책임전가(Buck-passing)와 균형(Balancing)이 배합된 형태의 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보여준 대외정책 기조로서의 일방적 축소 가운데의 역외균형 전략은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역외균형전략과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봉쇄 수준의 강압정책의 결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즉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분담금 재조정을 통해 미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동맹국들과 함께 아시아 내 세력전이의 논란을 종식시키며 역내 안보위협요소를 해결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미국의 해군력 강화 천명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은 아시아 해군력 재균형(Pivot to Navy)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미국이 역내 주둔(Onshore) 대신 해군력을 이용한 대량보복위협(Massive Retaliation Threat)을 배가시켜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와 같은 현상변경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경제, 외교, 군사적 측면에 결합된 다층적 안보협력레짐으로서의 재균형정책이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에 의해 군사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접근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외교안보 고위직에 인선된 인물들은 대부분 매파적인 성향의 군출신 인물들이 등용되어 있다. 또한 중동지역에 근무했었거나 이 지

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시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동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에 대한 동적·비동적 전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접근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과연 '버티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전략적 인내의 접근법 보다는 상당히 공세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대북정책과 대중정책 간의 관계, 혹은 동북아 전략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일정부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2017년 한국은 대북정책뿐만이 아니라 방위분담금 및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다층적인 조정압력 속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한국이 학습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미중관계에 따라 여러 현안에서 한국이 양국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을 정확히 식별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출구전략을 갖추고 있느냐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정구연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3. 일본

가. 2016년 정세

2016년 일본 국내정치의 특징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의석 획득에 성공하였고, 이는 자민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대외정책은 아베 총리의 활발한 '정상(해외 순방) 외교'와 '전략 외교'가 돋보인 한 해였다.

참의원 선거는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민당의 권력 강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자민당 권력 강화는 곧 아베 총리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26일에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黨則)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예정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당선된다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한편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이후 권력 강화 움직임은 내각 개편으로 본격화되었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를 각각 외무대신과 내각특명담당대신으로 유임시켰고, 측근인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를 각각 후생노동대신과 총무대신에 임명하였다. 무엇보다 교과서 문제, 방위력 정비, 아베노믹스 추진과 같은 아베 노선의 핵심 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부과학대신, 방위대신, 경제산업대신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세코 히로

시게(世耕弘成)를 각각 임명함으로써 내각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6년 일본 외교는 아베 총리의 '지구본 외교'라 불리는 해외 순방 외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는 '중국 견제'라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안보 협력 외교'와 '경제 외교'의 형태로 일본 외교를 전개하였다. 즉 '안보 협력 외교' 측면에서는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다층적 안보협력' 차원에서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차원의 안보협력을 추진하였고, 인도 고속철도 건설 수주 및 원자력 협정 체결,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제안 등 해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중국을 의식한 '경제 외교'를 추진하였다.

2016년 미일 관계를 보면 미일 양국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5월 27일 G7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였고, 아베 총리는 12월 27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다. 이는 미일 간에 기존의 안보, 경제 협력 강화에 더해 과거 역사에 대한 화해를 통한 미일 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2016년 중일 관계는 2014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 갈등의 '관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해공군의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베 정권은 남중국해 문제도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중국과 '해공 연락 메커니즘(핫라인)' 설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관리' 정책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6년 러일 관계는 5월, 9월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12월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북방영토의 영유권 문제와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 그리고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관계 진전이 나타났다. 아베 정부의 대러 외교는 기존에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것과 달리, 북방영토 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러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한일 관계는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2016년 1월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겪으면서 관계 회복 및 협력 모색 단계에 들어섰다. 먼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이행으로 한국 내에서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한국 측에 지불하였고 이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북한 위협 이후 한일 간 안보협력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11월 23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2016년 연말에 불어닥친 한국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등 향후 한일 관계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6년 북일 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 제재 조치 실시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2월 10일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 발표 이후 북한은 이틀 뒤에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한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12월 2일)를 발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

는 입장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력' 원칙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 일본의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주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향후 일본 정국의 중심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둘러싼 논의라는 점이다. 일본 정계에서는 1월 해산설이 2016년 가을부터 확산되었지만,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는 점에서 1월 해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수가 다소 감소해도 아베 총리의 선거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향후 2017년 해산 시기를 둘러싼 일본 내 논의가 연초부터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는 헌법 개정 문제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아베 총리가 최종적으로 완수하고 싶어 하는 일생일대의 과제이다. 2017년 3월 자민당 대회에서 총재 임기 연장 문제가 해결되고 2018년 자민당 대회에서 총재 3선을 확정지으면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중의원 해산은 헌법 개정을 위한 하나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에도 '대중 견제'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정상 외교에 기초한 전략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의 미대통령 당선으로 미일 관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 및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외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대중 관계는 중일 수교 45주년을 맞이하여 계속적인 관계 개선 추구와 함께 동중국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 협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러 관계는 아베 정권의 지속적인 대러 경제 협력 방안이 제시되겠지만, 현재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방영토 문제 해결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는 한국 정국의 불확실한 상황 및 향후 새로운 정부 탄생 가능성에 따라 아직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어렵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안보 측면에서는 한일 GSOMIA 체결에 이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 ACSA)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일 안보 협력의 진전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촉진시키는 한편, 한국 입장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북일 관계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멈추지 않는 한 일본의 강경한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한편으로 북일 대화를 모색하는 '대화와 압력'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북일 간 비공식적, 비밀 접촉이 계속해서 시도될 전망이다.

•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4. 중국

가. 2016년 정세

2016년 중국은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에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하고자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켰다. 특히 3월 양회에서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 5규획)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시진핑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반부패의 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경제사회적 개혁과 구조조정의 계획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특히 11월 중공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에게 카리스마적 권위의 상징인 핵심 명칭까지 부여하였다.

외교적으로는 국제 다자회의에서 자국의 지도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인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확대되었다. APEC(2014), 아시아신뢰구축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회의(2015)에 이어 올해는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각종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G20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시도하려던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사드, 남중국해, 인권 등 미중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부각되어 기대되었던 큰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갈등과 협력의 구도가 지속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갈등의 측면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올 초부터 중국이 인공 섬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갈등이 격화되었다. 또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해 규정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 등을 야기했

고, 미국도 이를 통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 안보적 권리 행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밖에도 두 차례의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 배가되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희망과는 달리 대화보다는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가 가중되었다.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제시하였지만(2월 17일),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도발로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대북제재 방식에 대한 갈등을 겪었다. 미국은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국외노동자 송출행위 금지 및 이차제재(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된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3월 16일)했고, 6월에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또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찬성하였지만, '민생예외'의 한계를 둠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훙샹 기업 조사 발표(9월 20일) 등의 사건이 미중 간 사전 협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11월 30일)에서 석탄 수출 상한제 등에 대한 양보 등 협의의 가능성 역시 제고되었다.

북한과의 관계는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1월 6일, 9월 9일)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시도할 동력을 상실하였다.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에 찬성하였다. 그런데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획기적인 제재 이행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북핵과 관련한 입장 역시 기존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북핵의 주요 원인은 여전히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과도한 것이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지속시켰다.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 역시 큰 변화 없이 냉랭한 기조를 유지하였다. 고위급 회동은 정례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리수용 북한 외상과 시진핑과의 면담(6월 1일)이 성사되었지만, 제7차 당대회에 대한 설명과, 기존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시진핑 면담 이전 리수용과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회담(5월 31일)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표현이 등장하였고, 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에서 최선희 북한외무성 미국국장이 기자회견(6월 23일)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으며, 중국은 중국의 일을 북한은 북한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볼 때,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의 북중관계의 현실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의 대북제재 국면은 어찌할 수 없지만, 북중경제사회교류 등은 향후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과의 관계는 안보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벌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양국 관계가 급랭되었다. 한

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복잡한 대북 딜레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대북노선을 견지하였고, 한국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까지 야기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핵 고도화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 과정이 구체화함에 따라 간접적 보복조치를 단행하여 한중관계를 더욱 냉각시켰다. 특히 한류에 대한 제한이 눈에 띄었는데, 7월 말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제한령이 유포되고, 한중 문화 교류 행사 등이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8월부터는 한국인의 중국 복수비자 관행 발급이 중지되었고, 한국 연예인 팬미팅, 공연 등이 취소되었다. 11월부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되면서 더욱 강도 높은 한류 콘텐츠 제한령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갈등, 해양 경계 협정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있었으나, 사드 이슈에 따른 정치적 냉각으로 인해 상호간 협력의 틀을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실되었다. 더구나 기존 한중 간 체결되었던 다양한 전략 채널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상호간 이견 및 갈등이 확대되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은 중국의 시진핑 집권 2기가 구체화되는 해이다. 이미 시진핑의 권력은 상당히 공고화되었고 정치적 지배 역량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쟁세력들의 마지막 반격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세를 흔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시진핑이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중앙 정치 일선에 등장시킨다면, 강한 중국의 꿈을 표방하는 외교노선은 더욱 구체화되고 힘을 받을 것이다. 시진핑은 특히 해군 핵심요직에 측근을 포진시킬 정도로 해양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신형대국 관계의 주요 내용 역시 해군력 강화가 될 것이고, 비록 아직 해군력이 미국에 수준에 못 미치지만, 힘의 확대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는 비유를 들 정도로 미중 간 무역 적자 해결의 의지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상승,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대미 정책 역시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큰 가운데 미국의 신행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중국과 마찰을 각오할 정도의 파격적 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만, 양국 간 협력과 발전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북 이중 전략을 지속시킬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시진핑의 인식이 쉽게 변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의례적 혹은 원칙적 대응을 통한 중국의 한반도 원칙(비핵화 포함)을 견지할 것이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을 이행하기는 꺼릴 것이다. 대신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지속적 관리와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대화 채널을 확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북핵 문제로 인한 사드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 남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반도 전략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특히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발 안보 문제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 것을 경험한 중국은 현재까지 두 문제를 연계하기 보다는 둘 다 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드 도입 검토 등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정책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전통주의 정책그룹을 중심으로 북한 자산론이 우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도 한중관계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현상 등과 연계되어 올해 형성된 냉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의 국내정치 변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 등이 있지만,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2017년 중반에 완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의 압박 및 보복 강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한동안 관계 회복 혹은 냉각 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하반기는 강한 중국을 표방하는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쉽게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중국은 사드 이슈와 별개로 한반도 안보환경 관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7년 말부터는 전반적인 관계 개선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이기현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5. 러시아

가. 2016년 정세

(1) 경제에 집중된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2016년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는 NATO와 대립각을 세우며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미국과 영향력을 다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북아에서는 중국과의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 이상의 적극성은 보여주지 않았다. 서방의 경제 제재와 루블화의 가치 하락, 저유가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과 극동 개발이라는 경제 중심 전략을 동북아의 핵심 노선으로 견지했다.

중러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가 유지됐으며 양국 지도자들 간 신뢰가 공고함을 보여주는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양호한 관계가 지속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중러 함대 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양국 간 군사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일러 관계는 아베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접근 노력에 힘입어 12월 15~16일 푸틴 대통령이 방일하는 등, 개선의 조짐이 엿보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경제 발전과 극동 개발 지원을 위해 3조 원에 달하는 경협을 시행하는 대가로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전망은 불

투명한 상태이다.

한러 관계는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는 한국이 남북러 삼각경협의 일환인 나진-하산 운송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중단하자 크게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노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에 대한 협력과 경제 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확인했으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다.

(2) '밀월'에 급제동 걸린 북러 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2013년부터 주목받았던 북러 밀월 관계에도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러시아는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조한다는 원칙이지만, 한미일이 주도하는 독자 제재에는 반대하며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11월 15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식품 184t과 디젤유 704t을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채택 과정에서 미중 간 논의로부터 배제된 데에 당혹하면서 결의 채택을 지연시키고 예외조항을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11월 30일 최종 합의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안에서도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극동개발부가 중심이 되어 북러 밀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했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11월 1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확인하고 특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이르는 전력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경협 의지에 호응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일례로 북한 외무성 3국 오승호 국장은 9월 12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네하예프 부지사와 회담하고 북한과 연해주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오 국장은 수산, 임업 등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발언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항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여 관광업과 교역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 관세청 통계를 분석한 한국무역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까지 북러 간 교역액은 약 5,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정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수출량은 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줄어든 반면, 북한의 대러 수출은 127.5% 증가한 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수산물로서 액수는 280만 달러로 큰 규모는 아니며, 2·3분기에는 수출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 최대 품목은 석탄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 초, 갈루시카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키우겠다고 천명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총 교역액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2016년에는 북러 정부 간 '수형자 이송 조약'이 체결됐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네 번째로 추진하는 사법공조 조약으로, 앞서 러시아는 2015년 11월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2016년 2월에는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2017년 전망

기본적으로 2017년에도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은 2016년과 동일한 구도 하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러시아의 관심은 경제 협력에 방점이 주어질 것이며 대중 편승과 한반도 균형 노선 속에서 북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면, 북러 관계가 2013~2014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공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처해 있는 바, 경협 활성화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7년 북러 관계가 동북아 전략 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집권 후 미러 관계와 북미 관계 등에

서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미러 관계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경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재자로 나서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남북 간에 모종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러 삼각경협의 재시동을 한국 측에 요구해 올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사드 배치가 본격화 될 경우, 러시아가 레토릭 차원 이상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미국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극동 지역에 새로운 타격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사드의 실전 배치가 북러 관계의 밀착을 추동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채널에서 신뢰 구축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북러 관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되, 남북 관계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이 기대될 경우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다만,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합의에 준하여 철저히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Ⅱ

북한정세

1. 정치동향

가. 2016년 정세

2016년 북한정치를 상징하는 5대 뉴스는 제7차 당대회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4·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만리마 속도전, 공포정치와 해외거주 북한 고위직 엘리트 탈북이다. 각 뉴스를 중심으로 2016년 북한 정치정세를 주요 일정별로 평가해 보자.

2016년 1월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시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어 6일 '수소탄 시험'이라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당시 김정은은 4차 핵실험 최종명령서 수표 사진을 공개하며 핵이 곧 김정은 체제임을 상징화하였다. 또한 제7차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70일 전투'의 모범창출 및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양을 위한 조직적 행보를 보인다. 2월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당인민군위원회 연합 확대회의' 등을 진행(2월 1일~5일)하고 4차 핵실험 후 정치행보를 점검하며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한다. 이후 당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군활동 독려 및 군조직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14일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충정맹세 예식을 진행하며,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 362개를 발표한다(2월 18일). 이후 공동구호 과업관철 및 '70일 전투' 완수를 위한 대중동원 사업에 주력한다.

3월 김정은은 한편으론 당대회 이전 군부에 대한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 군대 및 군사 활동에 치중한 현지지도 행보를 보인다. 또 다른 한

편으론 당조직을 중심으로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70일 전투 및 자강력 제일주의'를 기치로 한 대중사업이 집중된다. 4월 김정은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엔진 분출시험 및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발사 현장에 방문하며 미사일 기술수준 향상 독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식 참여 등 전략적 사업단위를 직접 챙기는 동시에 당대회 준비에 집중한다.

그리고 5월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다(5월 6일~9일). 이 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며, 동시에 정무국 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이 된다. 즉, 당을 통해 국가기구와 군대를 지도하는 당·군·정의 최고지도자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한다. 당대회 이후 대중정치 차원에서 제7차 당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를 개최(5월 26~28일)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충정의 200일 전투'를 선포한다(5월 29일). 6월 들어 김정은은 군대보다는 평양지역에 신설된 인민 경제·생활 단위를 중심으로 현지지도하며 인민친화적 행보를 보인다. 그리고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다. 이 회의는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제를 국가기구에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5~6월 북한은 '당·국가 시스템'의 일체화를 높이며 국제수준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반기 7~8월은 일종의 '숨고르기 정치'가 진행된다. 5~6월 김정은 주도의 당·국가 조직 및 엘리트 진용을 구축한 후 200일 전투 모범 창출 사업 중심으로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노력동원의 주부대인 청년동맹 제9차 대회(8월 27~28일)를 진행한다. 그리고 5차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9월, 김정은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역설하며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를 보인다. 5차 핵실험은 핵무기 기술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정치적으론 '핵무기 병기화'로 김정은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군사안보적 기반구축 선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중정치 차원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5차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상황을 인지하며 핵실험 이전인 9월 2일부터 함경북도 홍수 피해를 보도한 후, '200일 전투' 돌격대를 수해지역에 급파하는 등 하반기 내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10~12월 현재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김정은의 애민정치로 칭송하며 자연재해를 집단주의 및 애국주의 고양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여맹, 직맹, 농근맹 등 각종 사회단체 대회를 개최하며 '200일 전투'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전 막바지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연말 행보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2017년 신년사 준비를 매개로 한 2016년 결산 및 2017년 계획 총화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 '핵무기 병기화' 및 장거리 미사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2016년 북한 정치 실태 및 관련 사건을 총결산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5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김정은 정권의 조직·인적 진용 완성이다. 김정은 시대 통치시스템을 구축하며 김정은 절대권력을 당-국가 운영에 제도화한 것이다. 둘째, 4·5차 핵실험 및 연이은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김정은 장기집권의 군사안보적 기반구축이다. 셋째, 대중정치 차원에서 제7차 당대회 전후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진행하며 '만리마 속도전'의 노력동원 지속이다.

나. 2017년 전망

2016년 정치정세 및 제7차 당대회시 제기한 향후 북한의 전략을 중심으로 2017년 북한 정치를 전망해보자.

첫째, 핵·미사일 포함 과학기술발전의 경제·교육 정책과 연동이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대북제재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즉,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 봉쇄를 짓부시고 자강력을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첨단돌파전' 추진이다. 또한 내각 예산편성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증대하고 지방예산과 기업소기금 중 일부를 과학기술발전 사업에 충당하게 함에 따라 수탈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한 것이다. 세부 과제로 국제추세를 반영한 고등교육 구조조정(종합대학 확대, 기초과학-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 국제학술교류 강화) 및 산업현장과 대학의 연계 강화(공장대학 증대 및 원격-통신교육 발전)이다.

둘째, 대북제재 상황에서 대내통제 및 생산증대의 '자강력 제일주의'와 '만리마 속도전' 지속이다. 무엇보다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운동 기조에 따른 조직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당조직 및 근로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로 주민들의 조직생활 정상화 추진으로 드러날 것이다. 또한 당이 앞장서 북한 각 지역 단위·현장 간부 및 전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흐름이다. 당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당대회 기조로 볼 때, 조직지도부가 향후 당에 의한 국가·사회·군부 통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원홍의 보위부 뿐 아니라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한 최부일(검찰통)의 인민보안부가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로 내각의 경제적 지도력을 강화하며, 기업소·공장의 자립과 수탈을 지속하고,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해 전력과 식량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1년을 10년처럼 살라는 '만리마 속도창조운동'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김정은의 홍위병' 구축이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의 과반수 이상(54.9%)을 교체하였다. 이는 '김정은의 홍위병'을 양성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개정 당규약 결정서를 통해, '청년을 당의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울 것'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고위직 등용 가능성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권력관계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중앙당 요직 진출 가능성이 보인다. 현재 드러난 대표 인물로는 권력재편 과정에서 조직지도부 조용원, 선전선동부 김여정 등 김정은 측근세력들의 향후 직위 변동 및 고위직 진출 가능성이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 탈북의 영향이다. 2016년 해외거주 북한 고위직 탈북이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약(微弱)하다. 그러나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국내외 간부들에 대한 충성자금 마련 압박은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권(利權)을 둘러싼 권력기관 및 세력 간 갈등이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충성자금 헌납'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와 대북제재+김정은의 공포정치+북한 지배세력의 부패 및 이권투쟁'의 결합과 상관성

이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을 촉진하여 북한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박영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2. 경제동향

가. 2016년 동향

2016년이 시작될 무렵, 전문가들이 내놓은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전망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견인해 온 대외무역 여건이 2013~2014년을 정점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부진했던 2015년 농사 작황이 2016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전력 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영산업의 생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신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자, 북한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2016년 북한경제는 제로 내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북한의 경제실적이 전년에 비해 부진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는다. 우선 대북제재 조치와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등 북한의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었음에도, 2016년 1~10월 북한의 대중수출은 20억 8,7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데에는 핵심 제재 품목인 석탄 수출에 대한 민생용 예외조항의 남용,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의 중단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인 노동자 해외송출에 따른 외화벌이 규모도 전년 대비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노동자 송출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이후 급락하던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2016년에는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1~10월 대중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다. 전기기기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기계류, 플라스틱, 섬유 등 북한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물자의 수입은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에는 북한경제가 전년에 비해 보다 원활하게 작동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사 작황도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과 달리, 2016년에는 기상 여건이 양호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9월에 큰 수해가 있었지만 함북 일부 지역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수해가 전체 식량생산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영기업 부문의 실적도 전년 대비 다소 호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5년에는 전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여 전력난이 심각했으나, 2016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전력사정이 보다 나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당국이 제7차 당대회를 전후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라는 동원정책을 전개하고,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던 것도 국영기

업 부문의 실적이 다소 개선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영경제 개혁 측면에서는 커다란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계속 추진되고는 있으나, 국영기업 부문에서 얼마나 확산·보급되었으며,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기대를 모았던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 '6·28 방침', 2014년 '5·30 담화' 등을 통해 제시해 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재차 언급하는 데에 그쳤고,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시장 및 사경제는 김정은 정권의 관용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는데, 2016년에도 그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거래, 개인사업이 증가하고, 사유재산이 형성·매매되며, 사금융이 출현·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대회가 개최되고 노동력 동원정책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통제와 동원이 강화되었던 것이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의 확산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에도 북한경제의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대외적 환경이 2016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국 수출 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새로운 유엔 결의안 2321호에 의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수출에 대해 상한(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적은 쪽)이 설정되고, 은·동·아연·니켈이 수출금지광물로 추가되었는데,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결의안 2321호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의 외화벌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에 따른 석탄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의류 수출을 더욱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류와 같은 단순 위탁가공 공산품의 경우, 수출 시 외화가득률이 낮아 수출 규모에 비해 북한 당국이 실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적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석탄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벌이 감소분을 의류 수출 증대를 통해 만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화벌이 규모의 감소는 대중국 수입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북한경제의 대내적 여건 또한 그리 좋지 않다. 먼저 국영기업 부문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화벌이 규모의 감소가 대중국 수입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생산재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 요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노동력 동원정책이나 건설사업과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중 노동력 동원정책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9개월 간 실시되어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므로 2017년에도 지속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지속해 간다고 해도 자재·설비·전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현실과 괴리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저개발국가 단계를 벗어난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 대체로 저임금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산품 애용,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실패한 바 있는 수입대체 전략, 중진국 단계에서 추진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현실과 맞지 않는 성장 전략의 추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가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혁·개방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7년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2013년 시작된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역시 추진 상황과 성과가 모호하다. 이러한 개혁·개방 조치들이 온전히 실행되어 외국 자본이 투입되고, 생산 유인이 제공되어야 북한경제는 현재와 같은 침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장 및 사경제의 점진적 발전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 및 사경제로부터 재정수입을 얻고 있고, 또 이

를 제한할 경우 주민 생활에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북한의 대외 여건 악화가 시장 및 사경제 발전 추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시장 및 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 활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017년도에도 사기업의 합법화, 사유재산권의 인정 등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홍제환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3. 사회동향

가. 2016년 동향

2016년 북한 사회분야에서 나타난 특징적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제7차 당대회를 비롯하여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정치행사에 맞춰 '200일 전투', '70일 전투'를 벌여 일년 내내 주민들이 속도전식 동원에 시달린 점이다. 둘째, 2015년 나선 지역 수해에 이어 2016년에도 함경북도 일대가 수해를 겪어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복구를 위한 전사회적 동원과 선전에 활용한 부분이다.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의 확산·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대규모 도시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넷째, 북한 당국의 사상적·물리적 통제가 강화·지속된 점이다. 특히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분위기를 고취하고 사회적 긴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국경통제, 시장 개·폐장 시간 통제, 휴대전화 통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제가 강화된 부분이다.

우선 2016년 북한은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2월 23일~5월 2일)'를 선언하였고 당대회 직후에는 곧바로 '200일 전투(6월 1일~12월 15일)'를 발기하여 사실상 올해 전체를 속도전식 동원 기간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민들의 긴장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70일 전투'가 발기되었다면, '200일 전투'는 당대회와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를 연결하면서 당대회 이후의 사회적 긴장을 유지시키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정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투 기간에 각종 건설 사업의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동원된 주민들이 공사 중 사망하는 재해도 잇따랐다. 북한에서 속도전식 동원은 보통 정치적 차원에서 특정 시기 전환점을 모색하거나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조직 규율을 다잡고 사회적 긴장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둘째로 함경북도 일대 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다. 2015년 나진시 수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 재난급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7차 당대회 이후 후속 조치와 성과를 독려하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계획의 차질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도 나진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전사회적 동원 열풍을 만들어내고 나진시를 신속하게 복구 건설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함경북도 일대 수해도 이런 정치적 '전화위복' 또는 김정은의 애민정신과 치적을 선전하는 소재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8일 함경북도 수해가 전 인민의 노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가 되었다며 복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살림집 11,900여 가구, 탁아소·유치원·학교·병원·진료소 100여 개가 새로 건설되고 살림집 15,000여 가구가 보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0월 이후 복구 건설 현장과 복구·신설된 성과를 연일 소개하면서 '200일 전투'와 김정일 사망 5주기와 연계하여 선전을 극대화하고 있다.

셋째로 주목할 부분은 2016년에도 건설부문 활성화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과 우상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한

점이다. 북한은 각종 건설사업을 김정은의 사회주의 강국, 문명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하며 5월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김정일 사망 5주기 등에 맞춰 마무리할 것을 재촉하며 사회적 동원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되고 있는 도시 건설사업을 통한 건설시장이 활성화가 올 해에도 지속되었다. 평양에 대규모 거리 조성 사업을 벌이는 것과 함께 지방 도시에도 공원, 위락시설, 아파트 건설을 독려하였다. 건설사업은 자재시장, 인력시장, 운송·운수시장의 활성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2016년 대표적인 건설로는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조성 사업으로 특히 53층 초고층 아파트는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자 '과학중시' 사상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다음으로 평양시 대성구역에 조성한 '여명거리' 역시 10월 10일까지 완공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을 진행해 왔다. 무리한 공기를 설정하고 과도하게 많은 인력을 동원 빠른 속도의 건설을 하다 보니 건설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김정은은 오락시설에 관심이 많아 4D 영화관을 전국적으로 약 12개 이상 건설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2013년 평양 능라도 유원지의 입체율동 영화관 방문 후 전국에 걸쳐 12개 입체율동영화관 건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각 도시의 물놀이장, 스케이트공원, 영화관 등 문화오락 시설 건설이 2016년에도 지속되었다.

넷째, 제7차 당대회를 비롯한 굵직한 정치행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한 통제 역시 강화되었다. 특히 시장화의 확산·심화 지속에 따라 주민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전화 보급의 확대와 함

께 올해 이를 통제하는 조치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주민 약 10%가 넘는 약 3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주민들에게 보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중요 정치행사가 있는데다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 등 정세의 불안정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차원에서 외부세계와 통화하는 주민들을 다잡기 위한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한 해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도시 미관 관리 차원에서 허가된 공식시장 이외에 일명 '메뚜기'라 불리는 골목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규정 강화, 철조망 공사, 국경지대 불법통화 단속, 보안요원 및 감시시설 증강 등을 진행하였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에는 정책방향 및 구호 측면에서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사업과 구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구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존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인민중시', '청년중시' 등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당대회 이후 진행되었던 각종 속도전식 군중동원 및 당적 체계 정비로 인해 과도한 피로감을 느껴왔던 사회에 일정 부분 숨통을 트여주는 차원에서 2017년은 인민 친화적인 애민 행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 속에 건설·체육·관광의 3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해 왔는데, 2017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연령층이 된 시장세대를 체제 보위세력

으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관련 담론과 정책이 당대회 후속 조치 차원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를 통해 충원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신규 당원을 사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각종 사상 관련 대회들이 연초부터 시작돼 2017년 한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충성심을 다잡고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 및 조직생활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5대 교양(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 신념, 계급, 도덕)'을 '청년' 담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청년 관련 사상을 제창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상 당대회를 통한 체제 내적 결속, 사회기강 확립에 무엇보다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김정은의 '애민' 또는 '위민'의 행보가 '인민제일주의' 담론을 통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아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홍민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4. 북핵 문제 및 대외동향

가. 2016년 동향

2016년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던 해였다. 북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고도화된 핵전력을 과시했다. 아울러 핵전력에 대한 과장과 핵억지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다. 2016년 북핵 문제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 둘째,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호전적인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북핵 고도화의 진전과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으로 동북아 역내 주요국들의 안보딜레마가 급격히 증가했다.

우선 북한은 2016년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과거보다 진전된 핵능력을 과시했다. 1월의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제조 기술을 부분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핵무기 제조 기술력이 2세대인 핵융합탄 제조기술력 확보에 성큼 다가선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은 9월의 5차 핵실험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핵탄두 폭발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표준형 핵탄두의 규격화를 통해 핵무기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핵탄두제조기술 능력 뿐 아니라 탄도탄 미사일 능력도 집중 향상시켰다.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은 KN-08을 제외하고 현재 그들이 보유한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모두를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실험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스커드 ER과 노동 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 미사일 능력을 집중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북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SLBM 능력 또한 급격히 향상 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 및 생산 가능한 핵물질량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2016년 기준으로 최소 8개에서 최대 36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능력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를 추동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전례 없이 그들의 핵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즉 기존의 핵 모호성과 촉매형(Catalytic Posture) 태세를 폐기하고 가장 공격적인 핵 태세인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전 준비를 천명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을 지속한 것에서도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적인 핵전략 채택은 대외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그들의 전략적 지위가 핵무기 보유로 인해 이전과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에 따라 대외관계를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주장에 대응해 미국과의 '평화조약-군축' 프레임을 제기하며 완고한 비타협적 대외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즉 북한은 공세적 핵 강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북한 수뇌부의 정책결정을 전환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항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즉 북한과 국제사회 간 '강압 대(對) 강압'의 구도가 고착화된 한 해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공세적인 핵 강압전략은 동북아 역내 주요

국들의 전략적 딜레마와 갈등을 심화시켰다. 딜레마는 국내 정책적 차원과 국가 간 차원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중첩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한국 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갈등과 이에 따른 도전은 크게 제재 강화 대(對) 적극적 대북 개입·독자적 대북 억지력 강화 대(對) 한미동맹 강화·중국의 의지와 영향력 대한 논쟁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미국은 전체적인 대북 압박 강화 기조 속에서 대북 강압의 수위와 수단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중국은 결국 북한의 불안정성과 동북아의 불안정 사이에서 전략적 결단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본격 진입했다. 일본은 자구적 억지력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지력 의존 사이에 대한 선택과 동시에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염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국가의 외교안보전략 딜레마는 국가 간 갈등으로 확장되었다. 사드(THAAD)를 둘러싸고 한중·미중 간 갈등이 증폭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구조적 갈등 사례이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에도 북핵 문제의 진전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제재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과 미

국 그리고 북한이 서로에 대한 주장과 요구 조건을 대폭 낮추거나 상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따라서 2017년은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타협 국면으로의 전환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갈등이 확대 증폭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향후 북핵 국면의 행보와 관련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요 사안들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이다.

첫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양상 및 추가 도발 여부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전술적 노력을 도모할 것이다. 우선 핵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무기급 플루토늄(PU),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리튬 6와 같은 핵물질 생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IAEA사찰단 검증과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상당 기간 거부할 것이다. 북한은 아울러 증폭핵분열탄 제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핵탄두 제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미진했던 폭발력을 표준치인 50kt 내외로 높이기 위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실험을 성공한다면 북한은 이를 수소탄 실험의 성공이라 주장할 것이다. 핵탄두 운반체계와 관련해서는 2016년에 그 성능을 충분히 입증한 준단거리 미사일 실험보다는 실패가 잦았던 무수단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및 SLBM능력을 집중 시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강력히 시위할 것이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 대량 생산 및 실전배치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둘째, 2017년에도 북한은 비핵화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한 공세적인 핵 강압외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 접촉 및 대화가 있더라도 유의미한 비핵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이 그간 모라토리움의 대가로 요구했던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중단을 미국이 받아들일 이유가 현저히 낮고, 북한이 주장해온 군축협상을 미국이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요구할 것이므로 의미 있는 정부 간 대화의 성사 자체도 상당히 불투명하다. 오히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이며 북한을 강압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북 강압외교 주창자들로 구성된 것 또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설사 북한이 핵 도발을 자제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고도화 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제재 저항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북중 무역 환경 악화에 대응해 대내적 제재 저항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고자 할 것이다. 수출 자원을 국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용할 것이고 자원 배분의 개선과 집중을 통해 평양 중심의 체제수호 충성세력을 결집시킬 것이다. 북한은 또한 주민들의 민생 고통을 강조하면서 대외적 제재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며 제재의 부당함도 강력히 호소할 것이다. 신년사 등에서 의례 강조해 왔듯이 대북제재를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생존권 및 자주권 침해로 규정지으며, 핵 개발 지속의 대외적 명분

을 축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저항능력 강화 노력은 남북관계의 전략적 활용과도 연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즉 북한이 한국정치의 불확실성과 권력 교체기를 틈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제재 연합구도를 흔들고자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및 고위급 회담 개최 등과 같이 한국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통해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최우선적인 전략적 목표는 대북제재의 균열일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 정성윤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5. 대남동향

가. 2016년 동향

2016년 남북관계는 북핵 고도화와 국제제재 그리고 남북의 강 대 강 대결에 의해 파탄되었다. 남북 당국 교류·협상은커녕 민간 교류·협력도 거의 전무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는 있었으나 2015년에 비해 논조가 강경했다. 더욱이 2015년 당창건 70주년 기념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에서는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천명되었으나, 2016년 제7차 당대회 관련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에서는 대남·통일 비중이 낮아졌고 핵전쟁책동,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등 도발적 구호가 강화됐다.

2016년 북한의 국가정책에서 대남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김정은 정권 5년차인 2016년 제1의 국가목표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핵능력 고도화를 시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핵능력 병기화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정권안보와 대외정책에 종속되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자 대남정책은 아예 정책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2016년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은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Strategy)를 바탕으로 한 대남위협 지속과 평화공세 병행이다. 12월 10일 현재, 핵실험을 2회 진행했고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8회,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3회, 노동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총 24기를 시험발사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북한은 2월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 윽박질렀고,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하여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즉, 북한은 "서울 불바다", "핵참화", "핵성전", "불벼락" 등으로 우리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각급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을 동원하여 군사회담과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각종 대화를 제의하여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평화공세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 동안 사라졌던 대남공작원 지령용인 난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하고 스커드·노동미사일 시험발사의 예상 탄착지점으로 부산 앞 바다를 공개함으로써 한국 내 혼란을 조장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한국정치 개입은 2016년에 강화되었다.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북한은 조평통의 성명·담화 등을 통해 "대국들의 핵 대결장", "천문학적 혈세",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 등을 강조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또한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관영매체(노동신문, 중앙통신 등)를 총동원하여 거의 매일 '백남기 사망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였다. 특히 북한은 '최순실 게이트'를 '남한의 썩어빠진 사회제도에 의한 특대형 추문사건'으로 강변하면서 언론과 청년의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체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탈북 도미노 현상과 체제자긍심 하락을 차단하려고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을 한국정부에 의한 납치로 왜곡하는 선전전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과거 북한의 탈북자 대응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 북한은 미국·한국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제하고자 할 것이다. 2017년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운용하는데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도 새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상반기를 소비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국면 본격화와 정국 유동성으로 인해 2017년을 남남갈등을 노린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기에 적합한 때로 생각할 것이다.

2017년 역시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미정책의 하위영역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안보를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바라보는 북한에게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남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상반기 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관망 기조로 남북관계에 임할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 한국 정국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하반기 대남정책의 화전(和戰)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강화된 '두 개의 조선(Two Koreas)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명목적 목표(통일강국 건설)와 실질적 목표(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사실상 분리하여, 체제통합·흡수통일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민족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이해되는 분단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핵 보유국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일담론·남북협력은 전술적 차원에서 국면전환용·체제유지용으로 제한하고 통일담론보다 평화담

론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평화공세와 대남압박의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연초부터 유동적인 대남정세를 활용하여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다. 공식적인 남북 정부 간 대화제의보다는 국회회담이나 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제안하여 남남갈등을 노린 평화공세에 집중할 것이다. 이미 2016년 12월 중국 선양에서 통일대회합을 위한 남북·해외 준비위원회가 '조국의 통일·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연초에 그 활동이 구체화될 것이다.

올해 12월 북한은 새 대북압박 조치인 국제제재 2321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역시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6차, 7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위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 발사에는 신중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교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이다.

• 김갑식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1. 대북정책

가. 2016년 정세

2016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대표된다. 제재 및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추진의 계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는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여러 분석가들의 예상을 깨고 네 번째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교류·협력의 전면 중단과 해운제재, 금융제재, 수출입통제를 비롯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유엔안보리를 통한 다자적 대북제재의 강화를 추진했으며, 미국과는 역대 최대의 그리고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및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했고,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 다시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사 그리고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주요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시도는 없었으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외교정책적 자원이 집중 투여되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 어떤 대화·교류·협력도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사실상 기본 방침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서 '폭정'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을 환영한다는, 즉 탈북 권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2015년까지 대북정책의 주된 기조로 인식되어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넘어서 북한 정권의 변화(Regime Change) 혹은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론을 낳게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남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남북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부침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또는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남북관계는 2016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단절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협력, 사회, 문화적 교류는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차단되었으며, 군사적 긴장고조 방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핫라인(Hot-Line)마저 단절된 상황이다. 불과 1년 수개월 전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이후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개선의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가 2016년에는 완전한 경색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대북제재와 압박의 직접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성과는 없었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한 독자적 제재는 물론 역대 최강의 다자적 대북제재라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3월부터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재차 천명하고 동방의 핵대국을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기술도 수차례의 실험을 거치는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대화, 교류, 협력을 차단한 2016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김정은 체제는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2016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한 압박과 제재의 대북정책을 추진했으며, 상호간에 험한 비난이 더해지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적대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대화, 교류, 협력의 전면적 중단과 더불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비핵화의 과제는 대북압박과 남북관계 희생의 이유였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성과는 없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내정치의 향방이다. 최순실의 전방위적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4/4분기 한국 정치와 사회를 강타했고,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2월 9일자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다. 만약에 2017년 초반 또는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며 대통령의 기존 국정운영은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북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비핵화 관련 북한의 선제적 조치 또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의 뚜렷한 변동이 없는 한 이전과 다름없이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전개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현재와 같은 전면적 단절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다면, 우선 2017년 상반기 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권한대행 관리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 또는 미국의 정책과 같은 외적 요인의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이 유지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대북 대화·협상 그리고 교류의 증진을 강조해 온 야권의 발언권이 높아지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의 과도적인 국가정책 운영 및 관리체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2017년 하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여권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박과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 상황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2017년 하반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중시해 왔으며, 압박정책 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증진이 한반도 긴장해소 및 평화에 이롭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야권의 정책과 입장은 정권교체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안보딜레마와 국제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단계적인 개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인도주의적 지원부

터 재개되고, 대북 대화 채널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협상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는 동안 2017년 하반기 남북관계는 점차 개선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 통일정책

가. 2016년 정세

광복이후 통일패러다임은 3단계의 변화과정을 보였다. 통일 1.0시기는 세계적인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관계를 지속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의미를 지닐 수 없었으며, 따라서 안보정책 중심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7·7선언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이 시기는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한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한 통일 2.0시기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향한 대북정책중심기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북정책을 차원을 넘어 통일정책을 전면화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통일 3.0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통일대박' 담론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등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실현가능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 3.0시기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한 체제경쟁의 사실상 종식, 북한 위기구조의 심화 등 새로운 통일환경을 반영한 시대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정권의 성향을 넘어 통일담론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통일정책의 전면화라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결과의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력한

통일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효과는 미미한 편이며, 의욕적으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2016년 민간과 정부를 막론하고 남북한 간에 통일과 관련된 의미있는 대화나 접촉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바탕에는 북핵위기의 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4, 5차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 능력을 고도화 시켰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를 형성함은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집권 5년차 김정은 정권은 외형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핵개발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즉 핵 카드를 생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5월에 치러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천명하고, 경제 핵 병진노선을 항구적 노선이라고 강조한 이유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순순히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5년 만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세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정의 절반을 김정은 정권에서 소화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핵과 관련된 의미있는 협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핵 문제라는 근본적 위협요인을 방치하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구사는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통일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김정은 정권의 위기 및 북한 급변사태설의 확산은 통일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

들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몰락 또는 북한내 급변사태가 바로 친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동안 감소세였던 국내입국 탈북자가 2016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과 남성의 탈북, 기획탈북이 증가하는 등 탈북의 내용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장마당 경제를 제외하고 북한의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난도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친 통일여건은 물론 친남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 2017년 전망

2017년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아울러 한국의 신정권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통일정책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2017년 한국 신정권이 제시할 통일정책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및 통일기반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관여(Engagement)가 중단됨으로써 북한내 친통일 및 친남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유도와 아울러 이를 넘어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좀 더 입체적인 통일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7년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관여의 확대(Engagement Policy)

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관여정책은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통일정책이며, 북한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관여의 확대를 통해 북한내 친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내적인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독재정권의 붕괴는 또 다른 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중동 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북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관여의 확대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Ⅳ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1. 북한인권문제

가. 국제 논의 동향과 전망

(1) 2016년 정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2016년에도 지속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한 논의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10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및 12월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로 이어졌다. 북한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관련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2016년 4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동권리위원회에도 협약 이행에 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2013년 서명 이후 비준을 미뤄오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2016년 11월 23일 제출했다(노동신문, 11월 23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규명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3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독립전문가그룹(Group of Independent Experts)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6년 9월 9일 독립전문가그룹에 세르비아 국적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eserko)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방글라

데시 국적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를 임명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및 처벌 방안 모색을 임무로 하는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도와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이들의 보고서는 2017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7월 8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전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월 제71차 유엔 총회에 지난 유엔 총회 이후 북한 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변화와 성과 등을 정리한 첫 번째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2016년 11월 15일 북한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2014년 및 2015년에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유용된 자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노동권 침해 부분에서 강제노동에 준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흑백전도의 파렴치한 내용”이라 강력히 비난하며,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2016년 11월 23일 결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질문장을 유엔에 발송하는 등 공식적으로 항의했다(조선중앙통신, 11월 23일). 그러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도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2016년 12월 9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2014년 이래 3년째 연속 개최되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규명 필요성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정례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안보리에서의 결의 채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계되어 제재 결의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최초로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고통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321호는 이보다 더 나아가 본문 제45항에 북한주민의 고통에 대해 우려를 반복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해외노동자 문제를 본문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제재조치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와 인권문제의 연계는 이보다 앞서 이뤄졌다. 미국은 2016년 2월 18일 발효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6년 3월 16일 발효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제13722호(Executive Order 13722)는 인권유린 및 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과 관계가 있거나, 이

들의 수입을 위해 착취된 노동자 송출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미국 관할권 내 재산과 이익을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 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검열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in North Korea)'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인권침해 및 검열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관이 명시되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을 특별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추가하였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가 확산되며,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도 이어졌다. 2016년 2월 11일 이탈리아 하원은 유럽 의회 최초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016년 5월 10일 뉴질랜드 국회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2016년 6월 7일 연방 하원이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2) 2017년 전망

2017년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는 새로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논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3월에는 독립전문가그룹의 책임규명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의 검토 내용에 따라 향후 책임성 규명의 실제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던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한 차례 더 임기를 연장해 결과를 도출할 가

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유엔에서의 논의는 북한 내부 상황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결의 채택, 10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및 12월 총회에서의 결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조명받기 시작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조치와 더불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북한이 제출한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2017년 제68차 회기 중 검토해 11월 중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낼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7년 제76차 회기 중 검토하여 9월 중 최종견해를 낼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 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예준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국내 논의 동향과 전망

(1) 2016년 정세

2016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적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국

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남북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하여 매번 법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의 강도 높은 내용의 결의 채택,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면서, 국내적으로도 더 이상은 법 제정을 미루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큰 폭의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조항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법안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제인권기준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 척도로 제시됨으로써 '북한인권' 개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제5조),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6조). 또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제7조).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서도, 국제적 인도(引渡) 기준에 따른 투명한 추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명시되었다(제8조). 또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조사·연구, 정책대안의 개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10조).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수집·기록된 자료는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하였다(제13조).

이에 따라, 2016년 9월 28일에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소하였고, 10월 10일에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개소하였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두고 있다. 기획연구과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조정·종합,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조정 등을 담당하고, 조사과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보존 등을 담당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개소 이후 조사관 채용 및 교육, 운영지침 작성, 설문 개발 등의 준비 작업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법무부령 제878호). 이 규칙에서는 통일부에서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관리기관을 10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과 보존시설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016년 9월 14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진 및 위원진 구성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7년 전망

현재의 정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책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된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정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합의 도출을 미루기엔 여야 모두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전제로 2017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

북한인권법 제6조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면서, 모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함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 논란이 있었던 일부 규정들의 해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인권법」은 제3조에서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안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탈북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중국 체류 탈북 여성들과 이들의 아동,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등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선을 긋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행하는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이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소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적용은 현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에는 남북인권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인권대화의 경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실행가능한 공동의제 발굴,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2016년 9월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만큼, 향후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17년에는 북한인권 유관부처들 간에, 그리고 유관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법 시행 초기였던 만큼 유관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2017년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부처들 간, 그리고 유관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역할의 축소가 우려되었던 민간과의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대북지원

가. 2016년 정세

정부는 2016년 국정과제와 핵심 개혁과제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였고, 그 추진계획 중 하나가 인도적 문제 해결이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고, 유엔 모자패키지 사업을 포함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진행하고, 질병관리 등 중장기 보건위생협력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개혁과제는 남북한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대북인도 지원·협력을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주민들을 긴급하게 구호하는 사업이다. 또 남북한 간 신뢰를 쌓고,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긴급구호 성격의 단순 지원에서 지속적인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압박을 더 강화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고,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시기·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과 민간단체·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구분한다. 우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2015년 254억 원에서 2016년 29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은 당국의 지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으로 구분한다. 당국의 지원은 2011년 이후 중단되었고, 국제기구(WFP·UNICEF·WHO·기타) 등을 통한 지원은 2015년 117억 원에서 2016년에는 없었다.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은 민간단체 기금지원만 이루어졌고, 지원 액수는 2015년 23억 원에서 2016년 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2015년 114억 원에서 2016년 28억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한국적십자사의 지원은 2015년 4억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중단되었고, 민간단체 지원은 2015년 21개 단체에서 110억 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 28억 원으로 줄었다. 민간단체 지원은 유진벨재단이 중증결핵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이었다. 유진벨재단은 3월에 약 1천 500명분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MDR-TB·중증결핵) 반출을 승인받았고, 8월에 1천 명의 결핵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약품과 각종 물품의 반출을 승인받았다.

정부는 국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대북수해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6년 9월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홍수 피해를 입었다. 북한매체들은 사망자·실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가 수백 명이고, 6만 8천 9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만 9,800여 채(1만 1,600여 채 완전파괴)가 손상됐

다고 발표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대북수해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의 실효성·투명성 및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해 피해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수해 복구가) 당면한 북한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민생과는 관계없는 부분에 자기들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대북수해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지원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수해지원을 불허했다.

정부는 당초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유엔 모자패키지 사업을 포함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다.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대북 수해지원도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를 외면한 처사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 2017년 전망

인도적 대북지원은 2017년에 국내 정치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탄핵정국에서 2016년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

로 강화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정부는 4·5차 핵실험을 계기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중단되었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대부분 불허했다. 예외적으로 유진벨재단에서 진행하는 중증결핵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2차례에 걸쳐 허용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태풍 라이언룩으로 인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는 5차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에도 인도적 대북지원의 허용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기준은 당장 대북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북한주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긴급하고 위험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가이다. 정부가 유진벨재단의 중증결핵 환자 의약품 지원 사업을 허용한 것은 의약품 지원이 끊길 경우 중증결핵 환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긴급하고 위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유진벨재단의 결핵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조건 없이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실행하는 민간단체들은 쌀·비료·일반의약품 등 기존의 대북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불특정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서 벗어나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정부에게 인도적 대북지원을 허용하라고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원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표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당장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까지 불허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고 신정부를 구성하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인도적 대북지원의 폭과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당이 집권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인도적 대북지원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서 임산부·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모자보건 사업,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쌀·비료·일반의약품 등의 긴급하지 않은 포괄적 대북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집권한다면, 야당의 대북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이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폭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점진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국지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국제기구 통한 지원 등 정부차원의 무상지원과 식량차관 제공, 민간차원의 무상지원 등을 대폭 늘릴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또다시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긴급하고 위험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제한해서 허용하고, 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전용되거나 당·군 간부들이 횡령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들에게 지원 물품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 오경섭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3. 북한이탈주민문제

가. 2016년 정세

2016년 한 해 한국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총 1,335명이다(2016년 12월 18일 기준). 이는 전년(2015년) 대비 100여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각각 남성 251명, 여성 1,024명 등 총 1,275명(2015년)을 기록한 데 비하여, 2016년 한 해 유입된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각각 남성 281명, 여성 1,054명 등 총 1,335명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한국사회 내 유입된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2,706명이던 숫자가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으로 차례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에는 1,275명을 기록하여 최근 10여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100여명 가량 증가함으로써 2014년의 수준을 거의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던 추세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올해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국경을 넘어 바로 입국하는 경우보다 중국에 오래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남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2016년 한 해,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강화된 사회통제 및 국경통제의 지속으로 전체 탈북현상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었다. 첫째, 중국 닝보 소재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한국에 4월 초 입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처럼 여러 명의 탈북이 한꺼번에 이뤄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현상에 대해 유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견은 제재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북한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면한 일반적 어려움으로 인한 탈북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8월 17일 통일부 발표)한 사건이 있었다. 태 공사 가족의 한국 망명은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의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태 공사의 탈북은 올해 들어 증가한 고위급 탈북 현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분석되기도 했다. 즉, 김정은 체제 하 증대해 온 고위급들의 탈북이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북한 고위급 탈북현상은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제 안정성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발생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현상과 태 공사를 비롯한 일부 고위층의 탈북현상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2012년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을 반대하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 시위, 2013년 5월 라오스 북한 청소년 사태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안이 국내외적 주목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하 통제 강화로 인한 탈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강도 및 함경도 등 국경연선 지역 출신들의 탈북행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중국, 태국, 라오스 등 제 3국을 거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베트남을 거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난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적으로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돌파(11월 11일)하였다. 올해는 통일부가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대책을 표방하였다. 이는 탈북민 개개인의 맞춤형 정착지원의 틀을 벗어나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올해 9월에는 KBS 다큐멘터리 명견만리,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9월 30일)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최초로 통일부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경기도 안성 소재)를 방문하여 그 내부를 관찰 취재하였고,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 적응과 독일통일에의 함의를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미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정착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한국사회 내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은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고, 20/30대 청년의 비율이 높다. 한국사회 정착 탈북민의 숫자가 6년 만(20,000명 기록, 2010년 11월 11일)에 10,000명이 추가된 30,000명을 돌파하면서, 그 숫자가 단순히 상징이 아닌 한국사회 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체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젊은 노동력의 투입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통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3만 명에 이르는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먼저 온 미래'로서 통일한국 및

통일 이후 통합이라는 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6년 한 해 여러 북한이탈주민의 활동과 역할은 이러한 점을 좀 더 선명히 부각시켜 주었다고 평가된다.

나. 2017년 전망

2016년 한 해, 고위급 탈북현상이 비교적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해외 주요 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고위급 관료와 해외 작업장에 파견되어 있는 책임자급 인력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보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2015년부터 출판된 이들의 수기도 2017년 한 해 꾸준히 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안이 단순한 경제적 요인 혹은 사회·정치적 요인과 연계되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결합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인권적 요소를 중심으로 재해석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여러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이 재부각되고 이들의 자녀 문제가 주요 이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2016년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위시한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국내 유입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7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가 성공적 남북통합 모델과 연계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여성 및 청소년 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도 이에 병행해 꾸준히 강화될 것이다. 특히, 2016년 신설된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중심

으로 북한인권과, 인도지원과, 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의 사업 연계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북한여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출생한 제3국 출생 북한아동에 대한 언어프로그램 지원 등 국내차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계발될 것이다. 2017년 한 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안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체제 하 남한에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이주 경로에 대한 기본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부록: 2016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관계 일지

1.1	북한 신년사,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에 '대화 분위기 저해 행위 중단'을 촉구
1.1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통문답,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관련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라고 비난
1.5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 강조
1.7	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발표
1.8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 대남확성기 방송 시작 및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1.14	정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잠정 중단 발표
1.20	정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임을 표명
1.25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1년 연장 의결
2.4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강력한 유엔 제재 촉구
2.7	북한,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발표
2.8	북한 경비정 서해 NLL 침범, 경고사격 받고 퇴각
2.10	국회,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 발표
2.11	개성공단 체류 인원 280명 전원 무사 귀환
2.12	정부,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발표
2.14	우리군,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태세 '인포콘' 3단계로 격상
2.15	정부, 유엔 공개회의 계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
2.19	북한, 한·미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실명 비난
2.23	북한, 참수작전을 통한 체제붕괴 거론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 위협
2.24	청와대, 북한의 청와대 타격 위협 관련하여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평가
3.2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3.4	북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중대도발이자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방하고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3.4	북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하여 대남 비난
3.5	북한, 대통령의 집권 3년을 남북관계 파탄의 행적이라고 비난
3.6	북한, 남한 여성인권 유린 사례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
3.7	정부, 북한 국방위 성명(3.7) 관련 북한은 스스로 파멸로 가는 경거망동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북한 도발시 단호하고 가차 없이 대응할 것임을 경고
3.10	북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에 맞서 '북남사이의 모든 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 합의 무효' 및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의 모든 자산 청산' 등 선언 정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관련, 북한의 우리 자산 청산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3.12	북한, 한·미 연합훈련을 평양진격 훈련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조치 공식 선포
3.16	정부, 김정은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거론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재차 촉구
3.22	북한,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언급 및 대북정책 전환 지속 요구
3.23	북한,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 정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3.23)를 통한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 및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3.24	대통령,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3.23) 관련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
3.26	북한, 남한의 '북, 천안함 폭침' 6주기 발언 및 추모행사 비난 북한, 우리 정부의 대북 사죄 등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장거리포병대가 무자비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위협
3.31	북한,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 최대 출력 발사
4.1	정부, 북한 GPS 교란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 북한, 우리정부의 이산가족문제 언급을 "반북대결정책 합리화"라며 비난하고 대통령 재직 중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는 없음을 천명 정부, 북한 '인도적 교류 중단' 일방 선언(4.1)에 강력 규탄 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한도 핵 저지력 등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
4.5	북한, 청와대 등 우리 주요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 위협영상 공개

4.6 북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

4.7 북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대북 핵문제 발언에 대해 원색적으로 맹비난하고 대남 도발 위협

4.8 북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북핵외교에 대해 실명거론 비방 및 위협

북한, 4·13총선 관련 우리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 북한 도발위협을 떠들며 반공화국 대결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4.12 북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집단 납치 행위'라며 '인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값비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정부, 북한의 억지 주장 및 도발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핵·미사일 개발 포기와 주민 민생 개선 촉구

4.15 북한, 교육부의 전교조 간부 직권면직 등을 '정치보복행위, 반민주적 폭압만행'이라고 하고 4·13총선을 거론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

4.16 북한, 현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실업·사고 등 고발 백서 발표

4.17 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중대입장 천명 및 송환 거부 시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 실명거론 위협

4.21 북한, 북측 산림지역에 발견된 인화성 물질과 전기기폭 장치들이 들어있는 기구들이 산불방화를 위해 우리 측이 날려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위협

4.22 북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출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 발송

4.30 북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대북발언들 관련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 인민에 대한 모독이고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남 위협

5.2 북한, 남한사회를 중세기적인 암흑천지라고 폄하하면서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

5.5 북한, 대통령 발언('통일초석 마련', 3.30 4.29) 관련 '체제통일'로 치부하며 반발·위협

5.10 대통령,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을 비판하고 국가적 역량 결집 및 국민 단합 강조

5.16 북한,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5.16, 5.17)에 걸쳐 황강댐 방류

5.18 정부, 북한의 임진강 수계 댐 방류 관련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촉구

5.21 북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

5.22 북한,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협상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공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관련 '남한 당국의 유인납치'라는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즉시 송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최고당국자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5.27 정부,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공단 주재원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북한 단속정 및 어선 각각 1척 서해 NLL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5.28 북한, 우리 軍의 경고사격(5.27)에 대해 '청와대의 계획적인 책동'이라며 '지금 이 시각부터 아군(北)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함정들에 대해 경고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6.2 북한, 우리의 北 남북군사회담 제의 거부에 대해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 위협

6.3 정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6.2) 관련 북한의 대남 위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

6.8 우리군, 북한 어선 1척 동해 NLL 침범 관련 퇴거 조치

6.9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진행 및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6.10 정부, 북한의 통일 대회합 개최 제안(6.9)에 대해 기만적 통일전선 공세의 일환이라고 일축하고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

6.13 정부, 북한의 핵 개발은 그 동안 체결된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에 도발·위협 중단 및 핵포기를 통한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진전의 길로 나와야함을 촉구

6.20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경협보험 미가입 투자자산에 대한 피해 지원 절차 개시

6.21 정부,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발표

6.22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6.22)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6.22)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

6.23 통일부·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초청 행사 개최

6.24 북한, 정부의 6·15공동선언 관련 입장(6.13)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고 반북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기본정신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

6.25 북한, 탈북종업원들 법정출석 거부 관련 '신상공개, 가족들 면담 실현, 송환' 요구 및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위협

6.27 대통령,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이를 막으려는 우리와 국제사회 의지가 훨씬 더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북한, 광복절 전후로 평양이나 개성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6.28 대통령, 북한인권 현인그룹에 북한 인권 개선 역할 당부

6.30 북한, '핵선제공격태세완성(핵보유, 무수단 발사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전환' 강조

7.1 북한, 한·미·일 駐유엔 대표부 공동주최 브리핑·토론회 개최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은 공정성·적법성·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

7.4 대통령, 북한이 핵·미사일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서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할 것임을 강조

7.6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북한, 한·미의 '북핵포기' 주장 '절대 수용 불가' 및 '조선반도전역 비핵화' 요구 조건 제시

7.7 북한, 美 김정은 인권제재 대상 발표(7.6) 관련 무조건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 시 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 차단 및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위협

7.8 정부,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7.7) 관련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음을 강조

7.9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1발 발사

우리군,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

7.10 북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대북발언(7.4) 관련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남위협 및 반정부투쟁 선동

7.14 북한,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실명 맹비난

7.15 정부,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7.14) 관련 북한의 우리 국가 원수 비방 및 우리 사회 분열 목적의 비방·중상을 강력 규탄

7.19 북한,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7.21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상황 점검

7.21 북한,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외교에 대해 원색적 비난 및 '반대투쟁' 선동

7.22 정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7.21) 관련 대통령 비난 강력 규탄

우리군, 대남전단이 포장된 비닐 봉투 수거(김포 인근 한강)

8.2 북한, 연석회의 준비사업이 남한 당국의 방해와 남측 준비위원회 미결성으로 개최가 어려움을 강변
북한, 대통령 집권 및 국정수행 관련 맹비난

8.3 북한,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8.3)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
북한, 대통령의 국무회의상 대북발언(8.2)을 거론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 및 반정부·반사드투쟁 선동

8.4 정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8.3) 관련, 북한의 사실 왜곡·국론분열 획책·우리 국가원수 비방을 강력 규탄하고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와야할 것임을 촉구

8.11 북한, 우리 측 사드 배치를 비난하고 북핵은 흥정대상 불가임을 강조

8.15 대통령 광복절 축사, 통일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한당국'에 올바른 태도변화를 촉구

8.21 정부,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탈북 및 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테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

8.22 대통령, 북한 도발에 만반의 대비 태세 지시
북한, '집단 귀순 北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촉구 편지 발송(北 적십자회 중앙위 → 대한적십자사)

8.23 북한, 「8.25합의」 1주년 계기 현재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책임 전가·비난

8.24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
대통령,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

8.27 북한, 판문점 북측 감시초소에 투광등을 비춘 것 관련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며 '조준사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8.29 대통령,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관련 정부와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 및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를 당부

9.5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9.5)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임을 보여주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 규탄(외교부 대변인 성명)

9.7 북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北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9.7 북한,남북한과 해외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개최를 제안

9.8 정부, 북한의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9.7) 관련 통일전선 공세라고 일축

9.9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5차 핵실험
대통령,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및 핵실험 대책 긴급 논의

9.13 북한,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대통령 발언 및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 계획을 거론하며 대통령 원색 비난 및 '서울 불바다' 등 위협

9.20 북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관련 비난 및 '강력한 대응조치를 다발적·연발적으로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

9.22 북한, 북한 재난을 남 정부가 '대결모략'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위협

9.23 정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9.22) 관련,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선전을 통해 외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반박

9.30 정부, 사드 배치 부지 확정 발표

10.1 대통령,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을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는 등 대북메시지 전달

10.3 북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관련 맹렬 비난

10.4 정부, 북 노동신문의 대통령 기념사 비난(10.3)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돌볼 것을 촉구

10.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

10.11 대통령,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우리사회 안착은 북한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제 재정비 지시

10.15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1발 발사

10.20 북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

10.23 북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북인권결의안 표결 개입설' 관련 의견을 문의하거나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이 없다고 주장

10.24 정부,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10.23) 관련 우리 내부 갈등 부추기려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북측에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11.4 통일부, 북 도발 엄중성 고려 현 대북정책 계속돼야

11.7 정부, 김여정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11.9 통일부 "북, 한미동맹에 대해 추호도 오판 말아야"

11.10 정경두 공군총장, RF-16 타고 북 정찰…최북단 비행

11.15 인천 대북교류사업 '올스톱'…남북협력기금도 '바닥'

11.17 북한,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에 '현대판 을사오적' 비난

11.18 통일부, 북 '연평도사건 잊지말라'위협에 "강력 규탄"

11.20 북한, 또 '난수방송'…2주전 내용 재방송

11.22 유진벨재단, 북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방북(11.22~, 3주간)

11.26 북한, 박 대통령의 이북5도지사 임명에 "자멸 행위" 비난

11.27 합참, 북핵·미사일 대응조직 확대 편성
11.30 통일부 “전략적 시점 골라 독자 대북제재 발표”
12.2 정부, 북 ‘외화벌이 원천차단’…노동당·국무위 등 금융제재
우리군, 북한 서북도서·수도권 타격위협에 “강력규탄·단호히 응징”
12.3 북한, “남, 박근혜 구하려 안보 불안감 유포” 주장
12.5 내년 ‘북핵·미사일대응’ 예산 1조7천452억원…1천668억원 증액
12.7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끝나지 않아…지속해야”
12.8 정부, 북 SLBM 개발 저지 60개 감시품목 지정
12.11 군, ‘북 청와대 타격연습’에 “도발 시 응징”…경계태세 강화
12.12 우리 해경, 12월 11일과 12일에 동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3척을 발견하고 북한 선원 8명 구조
12.13 브룩스 사령관, 북핵 대응 위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책강구 할 것을 촉구
12.15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은 북 비핵화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밝힘
북한, 미얀마에 농업지원 제안
12.15 외교부 “북, 국제사회 경고 무시말고 인권침해 중단해야”
12.16 통일부, 북한이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 방송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북측은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불순한 의도의 이런 기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

북한정세 일지

1.1 김정은, 1월 1일 새해 ‘신년사’ 육성 발표 및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 김정은, 과학기술전당 준공식 참석
1.5 김정은,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경기 참관 중 포병훈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
1.6 김정은, “15.12.15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데 이어” 16.1.3. 최종명령서에 수표
1.7 북한, 4차 핵실험(1.6) 관련 각 계층 반향 연일 소개
1.8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시 군민연환대회에서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경축’ 정부 성명 낭독
1.10 김정은, 인민무력부 축하방문 및 김일성·김정일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1.11 김정은,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기술자·군인건설자·노동자·일꾼들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
1.13 김정은, 1월 12일 당 중앙위 회의실에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꾼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직접수여
1.13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1.15 최룡해 당 비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주년 경축 행사에서 연설

1.17 박봉주 내각 총리,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작동 청년탄광 현지 요해

'주체혁명 위업 계승 완성' 위한 청년전위결의대회에 최룡해 당 비서·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 참가

1.18 박봉주 내각 총리,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참가

1.20 김정은,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 현지지도 및 김여정(당 중앙위 부부장) 수행

1.22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사업 농사차비 실태 현지요해

1.23 김정은,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현지지도

1.25 박봉주 내각 총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요해

1.26 북 적십자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에서 '급성 대동맥해리에 대한 첫 수술 성공' 및 이는 "대혈관 외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큰 돌파구로 된다"고 주장

1.28 김정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

2.4 김정은, 당중앙위원회·당 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 진행

2.6 박봉주 내각 총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장과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 현지요해

2.8 미사일 발사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경축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2.15 김정은, 2월13일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해 성대한 환영 연회 마련

2.17 김정은, 2월16일 '김정일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참배

2.18 박봉주 내각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2.19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과 기념사진 촬영

2.21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

2.23 김정은, 조선인민군 군악단 창립 70주년 기념 연주회 관람

2.27 김정은, 반탱크 유도무기 시험 사격 현지지도

3.2 김정은, 태성기계농장 현지지도

3.4 김정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3.6 북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 전투 분위기 고조를 위한 방송선전·직관선전·강연 선전 힘 있게 전개

3.9 김정은,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기술자들 만나고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

3.10 박봉주 내각 총리, 영남배수리공장·남포항·평양역 현지요해

3.15 김정은, 탄도 로켓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3.18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 선포 및 강령적 과업 현지에서 제시

3.20 김정은,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 방어연습 지도

3.22 김정은, 신형 대구경방사포 사격 현지지도
3.24 김정은,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지도
3.25 김정은,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통치기간들을 격멸 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 연합부대 장거리포병 대집중화력 타격연습 지도
3.26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3.28 김정은,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지도 및 리설주 동행
3.31 박봉주 내각 총리, 해주 트랙터 부속품공장과 해주 연결 농기계공장 현지요해
4.1 김정은, 신흥기계공장 현지지도
4.2 김정은, 새형의 반항공 요격유도무기 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 지도
4.2 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동흥산기계공장 현지지도
4.7 '세계 보건의 날' 행사,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으로 주북 세계 보건기구 대표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등 참가
4.8 김정은, 김여정·홍영칠 당 부부장들 동행으로 리철호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4.9 김정은, 신형 ICBM 엔진 분출실험 지도
4.10 박봉주 내각 총리,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와 남포 용접봉 공장 등 남포시 여러 단위들 현지 요해
4.12 인민군 대연합부대 산하 포병구분대들, '야간에 기습 상륙하는 적 집단을 격파하기 위한' 실탄사격 훈련 진행
4.14 북한,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 104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4.15 김정은, 당과 국가의 책임꾼들과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4.19 김정은,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 현지지도
4.23 김정은,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현지지도
4.24 김정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현지지도
북한, 인민군 창건 8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4.28 최룡해 당 중앙위 비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 참가
4.29 박봉주 내각 총리, 원산군민발전소 준공식 참가
5.6 북한,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개회사,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
5.13 김정은, 기계설비 전시장 참관
5.13 김정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등의 공개 활동
5.1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현지지도
5.17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사적비 '영원히 빛나라 불멸의 업적이여', 황해북도 인민보안국에 설립

5.19 김정은,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고 공장 일꾼들과 기념사진 촬영

5.21 김정은, 완공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현지지도
강석주 당 비서 식도암으로 사망, 장의식은 국장이며 위원장은 최룡해

5.24 김정은,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 요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비 준공식, 함경남도 인민보안국에서 진행

5.26 북한, 과학자들이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선전

5.27 김정은,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5.29 북한, 국가 비물질유산으로 단군제례 등 10여개 새로 등록

5.30 '당 제7차 대회 과업 관철'위한 당·국가·경제·무역기관 일꾼연석회의 처음 진행 및 200일 전투선포
김정은, 보건 산소공장 건설장 현지지도
김정은, 북-중 남자농구팀 친선경기 관람 시 최룡해·김여정·조용원 동행

6.1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담화 및 김정은의 구두친서 전달

6.2 김정은, 새로 건설된 평양 체육기자재공장 현지 지도

6.4 김정은, 새로 건설 중인 용악산비누공장 건설장 현지지도 및 공장 이름 '용악산비누공장'으로 명명

6.6 최태복 부위원장, 베트남 당 중앙위 청사에서 베트남 공산당중앙당 비서와 회담 및 연회 참석

6.7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경축 학생 소년들의 종합공연 관람 및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촬영

6.13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현지지도

6.16 김정은,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
북한, '원산 국제친선항공축전-2016(9월 진행)' 준비사업 진행

6.17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현지지도

6.19 박봉주 내각 총리, 함흥시 중요공장기업소들 현지 요해

6.21 김정은, 김정숙평양제사 공장 현지지도

6.22 김정은, 중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 현지지도

6.25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6.28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쿠바 제1비서의 특사일행을 만나 담화

6.29 김정은, '화성-10' 시험발사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촬영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6.30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 특사일행 접견

7.3 김정은, 새로 건설된 평양 중등학원 방문
7.6 김정은, 평양 자라공장 방문
7.8 김정은, 김정일 사망(7.8) 22주기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7.12 김정은, 평성 합성가죽공장 방문
7.14 김정은, 백두산 건축연구원 방문
7.16 김정은, 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당선 군부대들의 공연 관람
7.18 김정은,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지도
북한, '평양 중등학원' 준공식 보도
7.20 전국 잔디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委 주최), 7월 20·21일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진행
7.24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어분 사료공장 방문
7.25 박봉주 내각 총리, 경공업 부문 기술인재 양성기관인 '고려성균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지요해
7.27 김정은, 천리마 건재종합공장 방문
7.30 김정은, 새로 건설된 어구종합공장 방문
8.1 박봉주 내각 총리, 북창·덕천지구 중요기업소들 현지 방문
8.3 제12차 전국 기계설계 축전 개막식, 8월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8.4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 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김정은(개·폐회사) 지도밑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8.6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 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참가들과 기념 촬영
8.7 박봉주 내각 총리, 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 현지요해
8.9 자연에너지 개발과 이용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8.9~12),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8.10 김정은, '1월18일 기계종합공장' 방문
8.11 김정일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 발기 2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8월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8.13 김정은, 순천화학 연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 칠감 생산 공정 시찰
8.15 박봉주 내각 총리, 금성 트랙터 공장 및 순천 지게차 공장·강서 기관 부속품 공장시찰
8.18 김정은, 대동강 과수종합농장·대동강 돼지공장 현지지도
8.24 박봉주 내각 총리, 함경북도 금속공업부문 사업 현지 시찰 및 회령시와 라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경성 애자공장 등 방문
8.25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참관
8.28 북한 내각(8.27),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하여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

8.31 김정은, 「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9.1 김정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9.2 북한, 10호 태풍(라이언 록)으로 함경북도 홍수 피해(8.29~9.2)
9.5 정권수립(9·9절) 68주년 즈음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주체사상국제연구소 주최), 평양에서 진행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 개막식(9.5~9.8),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진행
9.6 김정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현지지도
김일성·김정일 자강도 현지지도('66.9) 50주년 기념 보고회(9.6), 강계시에서 진행, 김재룡(자강도 당 위원장, 기념 보고) 등 참가
9.6 제31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폐막식(9.6),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9.8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정권 수립일(9.9) 68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
9.9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정권수립 68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핵무기 연구소 성명(9.9)】 '북부 핵 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5차 핵실험 공식 발표
9.13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대회 참가
9.14 북한 외무성, 주북 아시아 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세 통보모임 개최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200일 전투에 기여한' 평양 326전선공장에 축하문 전달모임 참가
9.15 김정은, 새로 건설된 보건 산소공장 현지 지도
9.16 5차 핵실험 성공' 경축 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강원도·라선시 군민 연환대회 각각 진행
9.17 '핵실험' 성공 경축 함경남도·양강도 군민 연환대회, 해당지역에서 각각 진행
9.18 김정은, 강원도 고산 과수농장 현지지도
9.19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9.20 김정은,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시험 지도(서해위성발사장 방문)
9.22 김정은, 5차 핵실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 촬영
9.23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삼지연군에서 진행된 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
박봉주 내각 총리, 함북 피해 복구 자재를 수송하는 '남포항·원산항'

현지 요해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 주장 연설
9.24 김정은, 대동강 주사기공장 현지 지도
9.26 최태복 당 중앙위 부위원장, 제10차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 참가
9.30 김정은, 룡악산 샘물공장(식수공장) 현지지도
10.4 북한, 우주정복 활로 열것…'로켓' 발사 추진 재확인
10.5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북한, 수해복구·노동당 창건일…북·중 접경서 잇단 대북 물자수송
10.6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각국에 대한 '북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격하 요청'등 대북제재 조치 관련 위협
10.7 김정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0.8 김정은, 11일 만에 공개석상…류경안과종합병원 시찰
10.10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설립 71주년 맞이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10.13 북한 대표,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을 주장
10.15 북한, 수산물 중국에 팔아 연간 3천억 원 외화벌이
북한, '김정은 죽는' 러셀 발언에 "덤비면 백악관부터 없어져"라고 대응
10.16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0.18 박봉주 내각 총리, 홍수 피해 복구현장 시찰
10.20 김정은, 수해지역 이재민들에 담요 전달
10.26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하노이) 연설
10.29 김정은, 비누공장 방문
김정은,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0.30 김정은, 총 7차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세계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서 연설
11.1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11.4 김정은, 특수작전 대대 시찰 및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총참모장 동행
11.9 김정은, 미국 대선일 맞춰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 시찰
11.11 김정은, 서해 최전방서 포격훈련 참관
11.13 김정은, 연평도 북방 4㎞ 최전방 시찰

11.14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함경북도 수해복구에 나선 군 장병과 주민에게 보내는 감사문 발표
11.17 김정은, 인민군 수산사업소 잇달아 시찰
장일훈·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제네바에서 美 38노스팀 접촉
11.19 김정은, 북한군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를 현지지도
11.20 김정은, 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시찰
11.26 김정은, 산악보병부대 스키훈련 참관
11.28 김정은, 삼지연군 찾아 김정일 추모
11.29 김정은, 쿠바대사관 직접 찾아 카스트로 사망에 조의
12.1 최룡해 이끄는 북대표단, 사망한 카스트로에 조의
12.2 김정은, 서울겨냥 포사격훈련 지도
김정은,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신임 국왕에게 축전 보냄
12.4 김정은, 리설주와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12.6 북한, 올해 창립 70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의 1기 졸업생을 모티브로 한 영화 '졸업증' 띄우기에 나섬.
12.7 김정은, 신축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시찰
12.9 김정은, 강원도 원산구두공장 시찰
12.13 김정은, 원산군민발전소 시찰
북한, 김정일 사망 5주기 맞아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의 회고모임' 진행
12.15 김정은, 군 수산사업소 시찰

동북아정세 일지

1.2 한·중 FTA 2차 관세인하
1.6 북한, 4차 핵실험 성공 발표
1.7 러시아, 북한 핵실험 비판
1.8 일본 국회, 북한 핵실험 비난 결의안 채택
1.10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 독자적 제재 검토 지시
1.11 중국, B-52 한반도 전개·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 표명
1.13 미국 하원, 대북제재법(H.R. 757) 처리
1.15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참여 의사 공식 표명
1.17 일본, 대만 정권교체 환영 의사 표명
1.18 한·중·일 FTA 9차 협상 개최
1.21 미국 CSIS,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공개 권고
1.22 러시아, 북한 나진-하산 구간과 연결되는 철로 확충
1.24 미국, 대북 위안화결제 제한·위안화계좌 동결 중국에 요구

1.25 중국, 안보리 협의서 대북 원유 수출중단 반대
1.26 중·일 경제협의체 구성
1.28 미국 국방부, 북한 미사일 도발 자제 촉구
1.30 유엔, 북한에 체포 이후 실종된 5명 정보 제공 요구
2.4 미국·일본, 북한 미사일 추적 위해 이지스함 한반도 주변 집중 배치
2.5 북한, 한·미 '키 리졸브' 계획 비난
2.7 북한, 광명성 4호 궤도 진입 완전 성공 발표
2.9 일본 국회, 북한 미사일 항의 결의문 채택
2.10 일본, 북한 국적자·선박입국금지 및 100만원 이상 대북송금 금지 독자제재 결정
2.12 미국 의회, 대북제재법(H.R. 757) 통과
2.14 북한, 이동식 ICBM 부대 'KN-08 여단' 창설'
2.15 북한 매체,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선전포고 주장
2.16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2.18 중국, 둥펑-31 ICBM 발사장면 첫 공개
2.19 일본, 북한 국적자 입국금지 및 대북송금 금지 대북제재 확정
미국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2.21 북한, 핵보유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주장
2.22 북한, 일본 경찰 조선총련 산하단체 압수수색에 반발
2.27 미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비군사화 남중국해 전역 적용 요구
2.28 중국, 남중국해에서 2016년 첫 구축함 실탄 훈련
2.29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3.1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핵포기 압박 및 일본 위안부 합의이행 촉구
3.2 중국, 대북 독자 제재로 대북송금·북한산 광물수입 중단
3.3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만장일치 채택
3.5 EU, 개인 16명·단체 12개 추가 대북 제재
3.6 중국, 올해·향후 5년간 중점사업에서 북·중 경협 삭제
3.7~18 한·미 키 리졸브 연합훈련 실시
3.7~4.29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FE) 연습' 실시
3.8 중국, 제재대상 북한 선박 입항 거부
3.9 미국 ISIS,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 가능성 제기
3.10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3.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에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3.13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부산 입항
3.17 미국, 북한에 억류대학생 즉각 석방 촉구
3.18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3.22~25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
3.24 일본 정부, 북한 도발적 언동 자제 요구

3.26	북한 매체, SLBM으로 워싱턴 공격하는 동영상 공개
3.3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상회담 요청 거부
3.31	한·미·일 정상회의
4.3	일본 자위대 잠수함 필리핀 입항
4.6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한·미 군사훈련 대북 영향 우려 발언
4.8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 사드배치 필요성 주장
4.11~18	장준규 육군총장, 미국·일본 방문
4.11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회담
4.12	중국, G7 해상안보성명에 반발
4.15	일본, 201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재
4.20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개최
4.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4.29	중국,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 미국·러시아, 시리아 영토에서 30일 휴전 합의
4.30	중국·일본, 외교장관 회담 개최
5.4	미국 국무부, 러시아와의 시리아 알레포 휴전 합의 발표
5.5	일본 자민당 부총재·리위안차오 중국 부수석 회담 개최
5.6	아베 신조 일본 총리·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5.9~10	한국·미국, 통일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5.10	미국 해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5.12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판문점 방문
5.19	중국 전투기, 미국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 및 진로방해
5.20	러시아, 미국에 시리아 내 테러세력 근거지 연합공습 제안
5.21~27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5.23~24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 개최
5.24~25	미·중 해상군사안전 회의 개최
5.25	미·일 정상회담 개최
5.29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베트남·스리랑카와 중국 해양진출 공동대응 합의
6.1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6.3	한·미 재무장관회의 개최
6.4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6.6~10	미국·필리핀 해군, 남중국해에서 연례 합동훈련(CARAT) 실시
6.8~9	김홍균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
6.13	한·러 외교장관 회담
6.15	오바마 미국 대통령·달라이 라마 회동
6.18	미국, 남중국해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작전 수행
6.21	러시아, 자체 MD 체계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
6.25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중 및 양국 정상회담 개최

6.28	황교안 국무총리·리커창 총리 회담 개최
7.3~14	중국·러시아, 대규모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 수행
7.8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7.9	러시아, 사드배치 및 아태지역 전략적 균형 훼손 우려 표명
7.13	중국, 사드배치 프로세스 중단 촉구
7.14	한·미·일, 제4차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7.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에 사드 배치 지지 표명
7.17~20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 방중
7.22	중국, 북한 제재 이행보고서에 한반도 사드 반대 의사 기재
7.24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7.25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7.26	한·미 국방차관 회담 개최
8.2	일본, 1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기재한 방위백서 작성
8.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한 노동미사일 대응 연쇄 전화협의
8.11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방한
8.15~23	미 육군총장 방한
8.24	제8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8.25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9.2~3	한·러 정상회담 개최
9.4~5	박근혜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9.5	한·중 정상회담 개최
9.6	한·미 정상회담 개최
9.7	한·일 정상회담 개최
9.10	일본 방위상, 한국 국방부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
9.12	한·미 제1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9.1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9.20	오바마 미국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 회동
9.22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
9.26	한·미 해군, 지상목표물 정밀타격훈련 실시
9.30	한·미, 사드 배치 장소 확정
10.5	러시아, 미국과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 중단 선언
10.8~11	유엔주재 미국대사 방한 및 대북 제재 방안 협의
10.12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
10.15	중·러 정상회담 개최 사드·대북 제재 논의
10.19~20	한·미 국방회담 개최 대북 제재·확장억제 논의
10.20	한·미 국방장관간 제48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10.22	미국,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 중국 반발
10.26	러시아, 차세대 ICBM 첫 공개
10.27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대북 제재강화 논의

10.28	한·일 첫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북한발 해킹 대응 공조
10.29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10.31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11.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실무협의 4년 5개월 만에 재개, 1차 과장급 실무협의 개최
11.2	중국, 자국 어선에 대한 한국 해경의 무력 사용 강력 비난 미·일, 태평양 괌 부근서 첫 합동상륙훈련
11.4~10	한·미·영, 첫 공군 연합훈련 '타이푼' 공개
11.9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2차 실무협의 개최
11.1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박근혜 대통령, 전화 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 재확인 국방부, 미 대선 결과 관련 상황평가회의 개최
11.13	일본, 센카쿠 등 무인도에서 무장충돌 대비 첫 훈련 실시
11.14~18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방미, 한미동맹 및 대북제재 논의
11.14	러시아 외무부, 맥폴 전 주러 미국 대사 러시아 입국 금지
11.17	아베 일본 총리·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회담
11.19	미·중 정상회담 개최
11.22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국무회의 의결
11.25	중, 전투기 편대 미야코 해협 첫 파견 및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11.30~12.5	한·미 공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훈련 돌입, 북 핵심 시설 타격연습
12.1~2	한·미 대잠수함전 워킹그룹 회의 개최
12.7	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확인
12.8	미·일, 진주만 공습 희생자 첫 합동추도식 개최
12.9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대북제재 협의
12.1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대북제재 협의
12.15~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
12.16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논의

북한인권 일지

1.1	호주,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20만 달러 기부
1.7	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 사업 한시적 보류 입장 표명
1.8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1.18~22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일본 방문
1.22	세계기금,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2800만 달러 투자
1.27	휴먼라이츠워치(HRW), '세계인권보고서 2016' 발간
1.28	국제투명성기구(TI),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북한 지목
1.29	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 방러 때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
2.2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교화소 출신 탈북자 300명 증언 담긴 책 발간
2.3	유엔 식량농업기구, 북한에 44만 달러 지원
2.9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주민 56만 명에게 식량 지원
2.16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반인도적 범죄 관련 김정은 조사 가능성을 북한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요청
2.22	영국 의회, 북한 여성문제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2.23	북한, 북한인권법에 반발
2.24	국제엠네스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지적
2.26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강제 송환 지적
2.27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에 ICC 관한 로마규약 비준 촉구
3.1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증언 진실 여부로 공방
3.2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행동 촉구
3.3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3.4	북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에 "중대도발" 반발
3.9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식량부족국가 재지정
3.10	북한, 북한인권법에 "남북 관계개선 여지 말살" 비난
3.14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인권탄압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표명
3.17	일본,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비난 결의안 9년 연속 제출
3.23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전문가그룹 설치
3.29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탈북자 사연 동영상 제작 및 공개
4.1	북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교류 중단 선언
4.4	미국 국무부, 북한 인터넷 통제 우려 표명
4.5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북한 고문 피해자 소개
4.9	북한 식당종업원 집단탈출 및 한국입국 보도
4.12	북한, 종업원 집단 귀순에 공식반응으로 비난 표명 및 송환 요구
4.21	영국,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
4.25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미-한-일 전략회의', 서울선언 선포
4.29	북한, 간첩 혐의 한국계 미국인에 10년 노동교화형 선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인권전략회의 개최
5.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촉구

5.5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김정은 반인도 범죄 책임 추궁 촉구
5.10	뉴질랜드 국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5.15	북한,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5.20	유엔 반기문 총장,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 촉구
6.2	유엔, 북한에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800만 달러 지원
6.7	통일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 불허
6.17	아르헨티나 하원,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6.20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 종업원 문제로 공방
6.21	한국 정부, 집단탈북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
6.27	북한인권 '현인그룹' 출범
6.30	미국 국무부, 북한 14년째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
7.4	중국, 북중접경 탈북자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 수십 명 추방
7.6	미국, 북한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포함한 개인 15명·기관 8곳 인권제재 대상에 포함
7.9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7.12	미국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에 '대북 원조 금지' 명시
7.13	캐나다, 탈북자에 첫 '인도주의 영주권' 부여
7.19	유엔, 북한에 납북 KAL기 여승무원 등 납북자 14명 정보 요청
7.28	몰타, EU 국가 중 최초로 북한 노동자 사실상 추방
7.29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책임자 6명 공개처형
7.30	러시아, 북한 해외파견인력 지속적 수입 의지 표명
8.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고문 피해자 재활기금 지원
8.6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요구는 내정간섭이라 비난
8.17	통일부,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 한국 귀순 사실 발표
8.22	북한,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8.29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증진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
8.30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협약 비준 촉구
9.1	러시아 주재 북한무역대표부 탈북 외교관 한국 입국
9.4	북한인권법 발효
9.5	미국 국무부, 북한에 강제수용소 방문조사 허용 요구
9.10	유엔,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전문가그룹 임명
9.14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전 인권대사 임명
9.16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41건 정보 요청 및 북한의 요청 묵살 사실 발표
9.22	폴란드, 자국기업 북한노동자 400여 명 노동실태 조사
9.25	EU, 북한 인권개선이 EU 대북정책 핵심이라 발표
9.29	미국 하원, 미국인 납북 재조사 촉구 결의 채택

9.30	유엔, 북한 수해복구에 410만 달러 지원 결정
10.5	영국, 정부 보고서에 '북한 인권범죄 자행' 적시
10.6	미국, 의회보고서에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노예노동 등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첫 언급
10.11	한국,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
10.12	북한 보위부 국장 탈북 및 국내 입국
10.19	북한, 유엔 총회에서 종업원 집단탈북은 한국의 유인 납치라 주장
10.20	러시아,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제한에 반대입장 표명
10.21	유엔 반기문 총장,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 제출
10.27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유엔에서 김정은 정권 인권 유린 실태 고발
10.28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확정
11.9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11.16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1.16~23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11.20~25	북한 인권 유엔 전문가 그룹 방한
11.24	북한 외무성 국장, 스웨덴 대사와 임현수 목사 문제 토의
11.28	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서방의 꼭두각시' 비난
12.2	유엔 및 주요 회원국 정부 북한 인권 담당 인사,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12.6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12.9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12.10	북한, 유엔 이산가족 보고서에 '적대행위' 반발 영국 정부, 북한 인권상황 비판하는 주북한 대사 동영상 게재
12.11	미국 상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 가결
12.3~12	고노에 타다테루 국제적십자사 총재, 북한 함경북도 수해 현장 방문 및 점검

• 정리: 김혜림 객원연구원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 도시정치 · 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 사회 · 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절

취

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 ~ 2017

KINU 통일연구원